KIEP
세계경제 포커스
World Economy Focus

2022년 12월 6일 Vol. 5 No. 35 ISSN 2635-5981

# 영국 중기재정정책(2023~28년)의 주요 내용 및 평가

**임유진**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(yjlim@kiep.go.kr, Tel: 044-414-1064)

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.044-414-1114 F.044-414-1001 • www.kiep.go.kr

## 차 례

1. 정책 발표 배경
2. 중기재정정책 주요 내용
3. 평가 및 전망

## 주요 내용

▶ 리시 수낵 총리가 이끄는 영국정부는 2022년 11월 17일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은 2023~28년(회계연도 기준) 5년 중기재정정책을 발표함.

- 지난 9월 23일(현지시간) 영국의 전임 내각이 '성장계획(The Growth Plan 2022)'을 발표한 직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었으며, 이후 정부는 정책을 철회함.
-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정책발표에 따른 정치적·경제적 혼란을 책임지고 취임 45일 만인 지난 10월 20일 사임하였으며, 동월 25일 리시 수낵 신임총리가 취임하여 새 재정정책을 발표함.

▶ 중기재정정책의 주요 골자는 △정부재원 확보 △가계 및 공공서비스 지원 △성장계획임.

- 정부재원 확보방안으로 증세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(248억 파운드)와 정부지출 감축(301억 파운드)을 제시하였으며, 2027년까지 549억 파운드 규모(GDP의 약 2%)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가계의 구매력 위축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△에너지가격 보장정책 연장 △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생활비 지원 △건강·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 추가예산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함.
- 중기재정정책에서 영국의 미래 번영을 위해 인력·인프라·혁신을 우선순위로 한 성장계획을 제시함.

▶ 영국의 재정건전화 방침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, 중기적으로 영국경제의 국제적인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,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책의 실현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함.

- 정책 발표 이후 지난 9월과 달리 금융시장의 변동폭은 제한적이었으며, 파운드화 가치는 상승하고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됨.
- 이번 발표로 영국중앙은행과의 거시정책 공조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지난 9월의 통화·재정 간 상충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.
- 다만 정부지출 삭감계획의 경우 대부분이 총선(2025년 1월 이전) 이후인 2025~27년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도 상존함.
- 경기침체·고물가·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세수확보 및 재정지출 축소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차입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.

# 1. 정책 발표 배경

■ 2022년 9월 23일(현지시간) 영국의 전임 내각이 '성장계획(The Growth Plan 2022)'을 발표한 직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로 금융시장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었으며, 이후 정부는 정책을 철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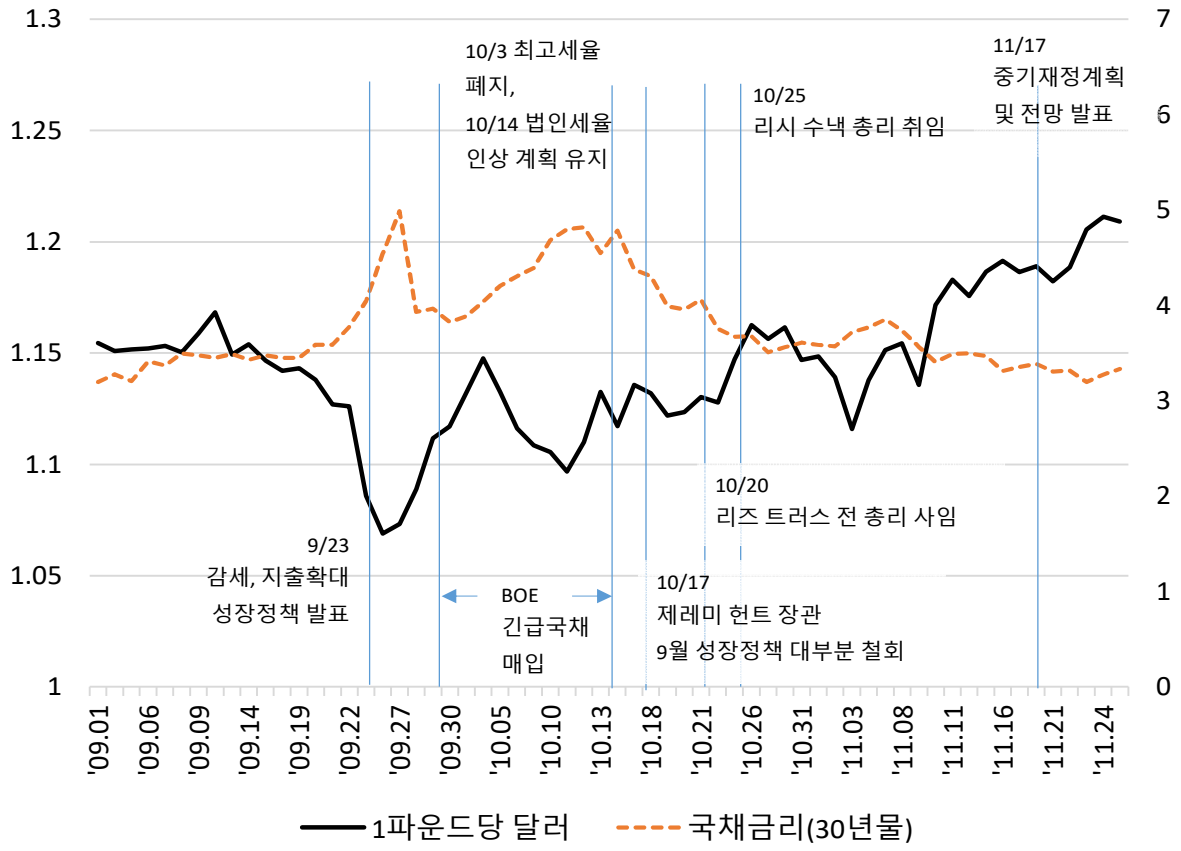
- 기존 성장계획은 450억 파운드(GDP 규모의 1.5%)의 대규모 감세안과 정부지출계획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으로 △법인세 인상계획 철회 △최고소득세율 구간 폐지 등이 포함된 감세정책과 △인프라 투자 확대 및 규제 개혁 △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에너지비용 보조정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함.
- 추가세수 확보방안의 부재로 정부부채 증가 우려가 확대되면서 파운드화 가치와 국채가격이 모두 폭락함.
  - o 성장계획 발표일 기준 전일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3.57% 폭락하고 국채금리(30년물)는 9.53% 급등함(그림 1 참고).
- 특히 국채가격의 폭락이 영국 연기금에 충격으로 전이되면서 영국중앙은행이 긴급국채매입(9월 28일)으로 시장에 개입하였고, 이후 금융시장이 소폭 진정됨.
  - o 영국 연기금은 대규모의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(부채연계투자, Liability Driven Investment)을 운용해왔으며, 국채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파생상품 증거금 부족에 따른 마진콜(추가 증거금 요구)로 파산위기에 직면함.
  - o 이에 영국중앙은행이 긴축·통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국채매입을 진행함.
- 전 정부는 10월 3일 최고세율 폐지안을 철회하고 14일 추가적으로 법인세 인상계획 유지를 발표했으며, 전임 재무부 장관(쿼지 콰텡)을 해임함.
- 새로 임명된 제레미 헌트 재무부 장관이 17일 기존 정책을 대부분 철회 및 축소하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되는 듯하나, 국채금리는 정부 발표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.
  - o 헌트 장관은 중기재정정책에 감세안을 주축으로 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증세·긴축 기조의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밝힘.

■ 트러스 전 총리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리시 수낵 신임총리가 10월 25일 취임했으며, 수낵 총리가 이끄는 영국정부는 11월 17일 재정건전화 정책을 담은 2023~28년(회계연도 기준) 5년 중기재정정책을 발표함.[1)]

-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정책발표에 따른 정치적·경제적 혼란을 책임지고 취임 45일 만인 지난 10월 20일 사임함.
- 리시 수낵 신임총리는 10월 31일로 예정되었던 중기재정전망 발표를 '올바른 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'는 이유로 11월 17일까지 연기하였음.[2)]

1) 영국은 매년 중기재정계획과 전망을 담은 예산안을 봄(Spring Statement), 가을(Autumn Statement) 두 차례 발표하고 있으며, 재무부는 중기재정계획을, 경제·재정 전망은 재정감시기관인 예산책임청(OBR: 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)에서 각각 담당함.
2) Bloomberg(2022. 10. 26), "Sunak Delays UK Economy Plan to Allow for 'Right Decision'."

그림 1. 영국의 정치상황·정책 변화 및 주요 금융지표 추이




주: 왼쪽 축은 파운드화 가치로 1파운드당 달러이며, 오른쪽 축은 국채금리(30년물)이며 단위는 %임.
자료: Bloomberg(검색일: 2022. 11. 28).

# 2. 중기재정정책 주요 내용

## 가. 개요

■ 중기재정정책은 △경제상황 안정 △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보 △영국의 장기적인 번영 구축을 목표로 △재정확충계획 △가계 및 공공서비스 지원 △성장계획을 담음.[3)]

- 최근 고물가·고금리 상황 속에서 영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영국정부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건전화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.
  - o 특히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해 영국정부와 영국중앙은행 간 정책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힘.
- 또한 예산안에서 전임 정부가 추구했던 감세·지출확대 정책은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, 증세방안과 함께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함.

3) UK Government(2022), "Autumn Statement 2022"(검색일: 2022. 11. 22).

ㅇ 당초 국가보건서비스(NHS)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분야가 공공지출 삭감의 주요 대상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질 저하 등의 우려가 확산된 바 있음.

-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, 높은 에너지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1년간 연장하고, 취약계층 대상의 생활비 지원정책도 마련함.
- 또한 공공투자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여 평균 GDP 대비 2.5%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, 인력·인프라·혁신을 3대 성장 분야로 제시함.

■ 이번 예산안은 증세와 세제혜택 축소 등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(248억 파운드)와 정부지출 감축(301억 파운드)을 통해 2027년 기준 549억 파운드 규모(약 GDP의 2%)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(표 1 참고).

- 영국정부는 고물가와 경제침체에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과 공공서비스, 공공투자의 지출을 확대하되,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소득·고수익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정책을 제시함.
- 또한 △공공부문 순부채(영국중앙은행 제외)는 중기재정정책 기준 5년 차까지 GDP 규모 내로 감축 △공공부문 순차입금 비중은 GDP의 3%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재정규칙(Fiscal rule)을 재설정함.
  ㅇ 경기침체 진입 등 불안한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따라 2021년 10월에 발표된 재정규칙을 완화함.[4)]
- 중기재정정책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공공부문의 순부채 비중이 2025년 정점에 달한 이후 점차 하향 안정화되며, 재정적자 또한 2027년부터 GDP의 3% 미만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(그림 2, 3 참고).
  ㅇ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 비중은 2025/26년 GDP의 97.6%로 정점을 찍고 2027/28년 GDP의 97.3%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  ㅇ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금는 2022/23년 GDP의 7.1%(1,770억 파운드), 2023/24년 GDP의 5.5%(1,400억 파운드), 2027/28년 GDP의 2.4%(690억 파운드)로 예측됨.

**표 1. 정부 정책결정에 따른 예산 지출·확보 금액(2022~28년)**

(단위: 십억 £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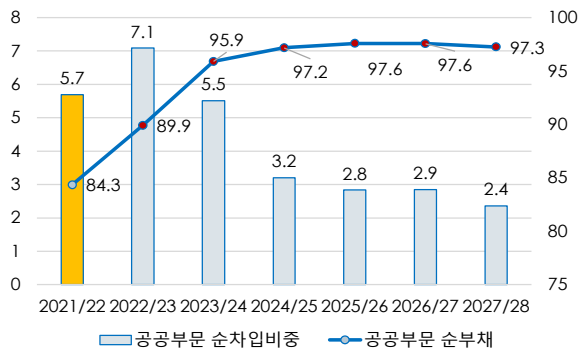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2022/23 | 2023/24 | 2024/25 | 2025/26 | 2026/27 | 2027/28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2년 3월 이후 정책 | -64.2 | -39.8 | +0.6 | +14.9 | +26.5 | +26.5 |
| 신규 정책 결정 (에너지 및 생활비 지원 제외) | +1.3 | -2.0 | +10.0 | +25.7 | +41.4 | +54.9 |
| 신규 정책 결정 (에너지 및 생활비 지원 포함) | -41.9 | -27.1 | +9.8 | +25.5 | +41.2 | +54.7 |

주: (-)는 경제성장을 위한 순지원액을 의미하며 (+)는 정부재정 확보금액임.
자료: Autumn Statement(2022. 11. 17), p. 12.

4) 재정규칙은 정부가 지출 및 세금에 대해 결정할 때 재정정책에 대한 한계선을 제시함. 2021년 10월 발표된 영국의 재정규칙은 다음과 같음: ① 공공부문 순부채는 예측기간 2~3년 차 사이에 GDP 규모 내로 예측 ② 현재 예산수지는 예측 기간의 3년 차에 재정 흑자 ③ 공공부문 순투자는 예측기간 동안 평균 GDP의 3% 미만 ④ 일부 복지지출은 지정 상한선 이하로 유지.

**그림 2. 공공부문 순차입비중 및 순부채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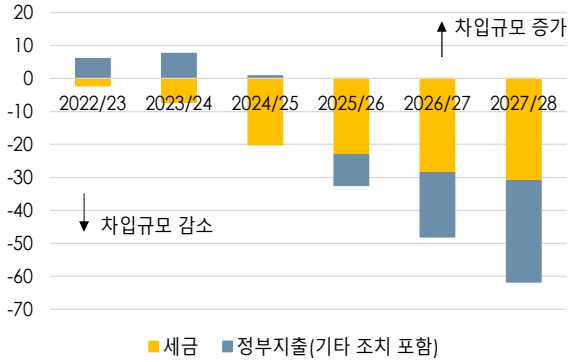
(단위: GDP 대비 %)




주: 1) 회계연도 기준임.
2) 2021/22년 이후 수치는 전망치임.
3) 공공부문 순부채는 영국중앙은행 부채 제외 수치임.
자료: OBR, "Economic and fiscal outlook charts and tables November 2022-1," TA.5(검색일: 2022. 11. 28)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**그림 3. 11월 중기재정정책에 따른 차입 규모 변화**

(단위: 십억 파운드)




주: 1) 회계연도 기준임.
2) 11월 중기재정정책 기준 전망치임.
자료: OBR, "Economic and fiscal outlook charts and tables November 2022-1," TA.5(검색일: 2022. 11. 28) 바탕으로 저자 작성.

## 나. 정부재원 확충방안

■ **[세수확보]** 영국정부는 △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△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△법인세 인상 △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윤세 확대 등으로 248억 파운드의 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며, GDP 대비 세금 비중은 향후 5년 동안 연간 1%p 증가를 목표로 함.

- 현 계획에 따르면 영국의 2024/25년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37.5%로 예상되며,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.[5)]
- [개인] 기존 9월 감세안에 제시되었던 기본소득세 인하방안은 철회한 반면, 최고세율(45%)을 적용받는 대상은 확대(15만 파운드→12만 5,140파운드)되었으며, 배당금·자본이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축소함.
  - o 또한 2025년부터 전기차가 자동차 소비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.
- [법인] 코로나19와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 및 제도 등에 대해 2024년까지 동결·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으나, 법인세는 기존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여 2023년부터 25%(기존 19%)가 적용될 예정임.
  - o 특히 소매업, 호텔·레저 등 대면서비스업과 같이 코로나19에 취약했던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율의 추가 완화(50%→75%)와 함께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함.
  - o 영국정부는 법인세율 25%에 대해 여전히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을 밝혔으며, 이 세율은 기준 수익(25만 파운드) 이상 기업에만 적용될 예정임.
- [에너지 기업 추가 징수] 영국은 지난 2022년 6월에 도입한 에너지이익부담금(Energy Profit Levy)의 세율을 인상하고 기간을 연장하였으며, 추가로 전력발전추가부담금(Electricity Generator Levy)을 신설함.

5) House commons(2022. 11. 17), "Autumn Statement 2022: A summary," p. 15.

ㅇ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혜택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초과이윤세(Windfall profit tax)인 에너지이익부담금은 2023년 1월부터 기존 25%에서 35%로 조정되며, 종료기한 또한 기존 2025년에서 2028년 3월로 연장됨.

ㅇ 전력발전추가부담금의 경우 원자력, 재생에너지 등 발전사에 초과 수익에 대한 45% 세율을 적용하는 증세안으로, 2023년 봄에 법제화될 예정임.

■ **[정부지출]** 2025년부터 실질 경상지출 증가율을 1%로 축소하고, 자본지출은 현재 금액 수준에서 동결하는 계획을 제시함.

- 재정지출 규모 감축의 경우 2021년 지출검토서(Sending Review)에서 이미 2024~25년까지의 부처별 지출한도(예산편성 기준)가 결정됐기 때문에 2025년부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임.

ㅇ 다만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2021년 예측보다 높으므로 지출의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.[6)]

ㅇ 정부는 정부지출에 대한 효율성·절약 검토(Efficiency and Saving Review)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지출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절약된 부분의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에 재투자할 예정임.[7)]

- 국방예산은 NATO 목표액인 GDP의 2% 수준으로 유지하고, 해외원조의 경우 향후 5년간 현재 수준인 0.5%로 동결함.

## 다. 가계 및 공공서비스 지원

■ 영국정부는 에너지가격을 비롯한 높은 물가로 인한 가계소득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('23~24년) △에너지가격 보장정책 연장 △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생활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함.

- 에너지비용 지원제도인 에너지가격보장(Energy Price Guarantee)은 기존에 2023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,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까지 지원하는 대신 가격상한선을 2,500파운드에서 3,000파운드로 제한함.[8)]

- 자산조사 혜택을 받는 가구(mean-based benefits), 연금수령자, 장애인 혜택을 받는 개인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900파운드, 300파운드, 150파운드를 추가로 지급 받을 예정임.

ㅇ 이번 정책의 결과로 2023~24년에 최하위 10% 소득 가구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측됨.[9)]

-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복지혜택, 연금, 국민생활임금 등의 인상률을 결정함.

ㅇ 복지혜택, 연금 등에는 2022년 9월 CPI 기준 10.1%의 인상률을 적용하고, 국가생활임금의 경우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역대 최대 인상률인 9.7%를 적용한 시간당 10.42파운드로 결정됨.

---

6) House of commons(2022. 11. 17), "Autumn Statement 2022: A summary," p. 7(검색일: 2022. 11. 22).
7) Efficiency and Saving Review: 가치가 낮고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그램에서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재지정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됨. 2023년 봄에 검토 진행상황을 보고할 예정임.
8) 에너지가격 보장제도는 지난 10월부터 도입된 정책으로, 각 가정에서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, 2,500파운드를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임.
9) House of Commons(2022. 11. 18), "Autumn Statement 2022: Reaction."

■ 재정건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개선,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건강서비스(NHS)·사회복지(최대 80억 파운드), 교육(연 23억 파운드)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함.

- 국가건강서비스(NHS)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으며 △긴급·응급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 △대기시간 단축 △2023년부터 통원치료 환자 수 2배 증가 등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## 라. 성장계획: 인력, 인프라, 혁신

■ 영국정부는 미래 번영을 위해 △인력 △인프라 △혁신을 성장 우선순위로 한 계획을 발표함.

-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EU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, 디지털 기술, 생명과학, 녹색산업, 금융서비스 및 첨단제조 등 주요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2023년 말까지 영국만의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임.

■ [인력]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노동시장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△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지원 △이민자 유입으로 숙련노동력 확보 △영국 자국민의 기술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, 이를 통해 생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- 이 정책은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음을 지적하였으며,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함.

■ [인프라] 영국은 인프라 관련 공공투자액 규모를 유지하였으며, 운송, 에너지, 디지털 등 모든 인프라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.

- △철도망 구축 △기가바이트 지원 광대역망 전국 확대(2030년까지) △우선 지역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(Leveling Up Fund 2차) 등 인프라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.
- 또한 Sizewell C 신규원전 건설, 풍력 및 태양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도 확보할 계획임.
- 영국정부는 특별투자구역인 투자지역(Investment Zone) 프로그램을 재조명하며,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의 산학연과 연결된 지식 집약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.[10)]

■ [혁신] 연구개발 예산은 2024~25년까지 기존 대비 1/3 증가한 200억 파운드로 확대할 예정임.

- Innovate UK, Catapault 등 영국의 혁신 프로그램에 예산을 할당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.
  - 특히 영국의 지역 기술혁신센터인 Catapault 기금은 기존 예산 대비 35% 증액할 예정으로, 영국 전역의 Catapault를 통해 혁신부터 상업화까지 전 영역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임.[11)]

10) 정책에 따르면 12월 중에 첫 번째 클러스터를 발표할 예정임. Autumn Statement, p. 34.
11) 현재 영국 전역에 산업별 Captapults 센터가 마련되어 있음: (웨일즈) 반도체 응용센터, (북아일랜드) 디지털센터, (스코틀랜드)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센터.

# 3. 평가 및 전망

■ 고물가·고금리의 주요 원인인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전망이 잇따르면서 영국경제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의 정도와 회복 속도가 정책 실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.

- 예산책임처는 영국경제가 2023년 1.4% 하락 이후, 2024년 1.3%, 2025년 2.6%로 회복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나, 불안한 대외경제 여건, 가계 구매력 위축, 기업투자의 약세가 지속될 경우 실현이 불투명함.
  - ㅇ 영국경제는 2022년 3/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.2% 하락했으며, G7 국가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(2019년 4/4분기)을 회복하지 못한 국가임.[12)]
  - ㅇ 예산책임처의 전망에 따르면 기업투자와 1인당 실질 가처분소득은 각각 2025년 이후, 2028년이 되어서야 2019년 4/4분기 수준(코로나19 팬데믹 직전)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됨.[13)]
- 경기침체·고물가·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세수확보 및 재정지출 축소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차입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.
  - ㅇ 고물가 지속으로 영국중앙은행이 금리인상, 양적긴축 등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, 정부의 추가적인 증세·재정긴축 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도 있음.[14)]

■ 영국이 재정건전화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화, 중기적으로 영국경제의 국제적인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,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책의 실현 및 지속가능한 동력 확보가 중요할 것임.

- 지난 9월의 정책안과 달리 이번 정책 발표 직후에는 금융시장의 변동 폭이 제한적이었으며,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상승,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됨(그림 1 참고).
  - ㅇ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증세·긴축 예산안 전망이 우세했음에 따라 금융시장 지표에 선반영됨.
- 또한 이번 발표로 영국중앙은행과의 거시정책 공조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지난 9월과 같은 통화·재정 간 상충된 정책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함.
- 다만 정부지출 삭감계획의 경우 대부분이 총선(2025년 1월 이전) 이후인 2025~27년에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전망도 상존함.[15)] KIEP

12) 국가별(G7) 실질GDP 변화율(2019년 4/4분기 대비 2022년 3/4분기 기준): 미국 4.2%, 유로 지역 2.1%, 캐나다 2.1%, 이탈리아 1.8%, 프랑스 1.1%, 일본 0.5%, 독일 0.2%, 영국 -0.4%. House of Commons(2022. 11. 22), "GDP-International Comparisons: Key Economic Indicators"(검색일: 2022. 11. 28).
13) 고물가 속 가계 구매력이 향후 2년 동안 7%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, 이는 경제성장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제시됨.
14) CNBC(2022. 11. 17), "UK government announces budget; country faces largest fall in living standards since records began."
15) IFS(2022. 11. 17), "An initial response to the Autumn Statement from the IFS"(검색일: 2022. 11. 22).

**부표 1. 예산안의 주요 내용**

| 구분 |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
| 재정확충 | 증세 | - 최고세율 적용 과세구간 확대(최고세율 45%, £15만→£12만 5,140)<br>- 배당금 공제액 축소 (현행) £2,000 → (2023년) £1,000 → (2024년) £500<br>- 자본이득세 공제액 축소: (현행) £12,300→ (2023년) £6,000 → (2024년) £3,000<br>- 2025년부터 자동차소비세 공제혜택 제외<br>- 법인세율 2023년 4월부터 25% 인상(£250,000 이상 기업 대상)<br>- 빅테크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및 탈세 방지 조치 2027~28년까지 £28억 확보<br>- 연구개발비 별도 공제율 확대 13% → 20%<br>- 추가이윤세 도입: 2023년 1월부터 석유 및 가스회사에 대한 에너지 이익부담금을 25%→35%로 인상(2028년 3월까지), 전력발전사에 2023년 1월부터 일시적으로 45% 추가부담금 신규 도입 |
| | 정부지출 감축 | - 2025~26년부터 일상적 지출은 실질기준 1% 증가 예정, 자본지출은 현재 수준 동결 |
| 지원 | 가계 지원 | - 에너지비용 지원: '에너지가격보장(Energy Price Guarantee)' 정책에 따라 에너지비용 가격상한선 £2,500 적용, 2023년 4월 이후 £3,000 인상<br>- 선별지원: 자산조사급여를 받는 가구 £900, 연금소득자 £300, 장애인급여 £150 추가지급<br>- 경제활동인구(Working age) 혜택 10.1% 인상<br>- 국가생활임금(National Living Wage, 만 23세 이상) 시간당 £10.42(9.7% 인상)<br>- 주택 관련 부동산 취득세: 향후 2년간 부동산 침체 전망, 취득세 혜택 2025년 3월 말까지 유지 |
| | 사업자 지원 | - 사업자 세금 산정 시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되는 기준(승수) 2023~24년 동결<br>- 소매, 호텔·식당·레저 서비스업 등 23만 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대책 연장<br>- 자산 평가 시 물가상승률 제한적 반영 등 |
| | 공공서비스 | - NHS 및 사회복지에 2024~25년 최대 £80억 지원: NHS(England)에 코로나19 이후 재정난 해소 및 성과개선을 목적으로 2023/24년, 2023/25년 각각 £33억, 사회복지부분에 2023/24년 £10억, 2024/25년 £17억 추가 지원 등<br>- 학교 2023~25년 추가기금을 제공하여 교육 품질 제고, 학생당 지원기금 2010년 수준으로 복원 목표 |
| | 인프라 구축계획 | - Sizewell C 원자력발전소 설립으로 50년 이상 기간 600만 가구에 전력 제공 가능<br>- 2030년까지 기가바이트 광대역 전역 구축, 맨체스터 고속 2호선, Northern Powerhouse Rail 및 East West Rail 등 철도 성장계획 추진<br>- Leveling up Fund 2차 계획 확정으로 2022년 말 전에 영국 전역의 우선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예산 추가지원<br>- 각 지방정부에 추가예산 지원 |
| 재정규칙 | | - 공공부문 순부채 예측 5년 차까지 GDP의 일부로 감축 목표<br>- 공공부문 순차입액 비중 GDP의 3% 미만 목표 |

주: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연도 4월~다음해 3월 말 기준임.
자료: UK GOV(2022. 11. 17), "Autumn Statement"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.